



[화물연대 운송거부] 석화업계 78만톤 출하 차질 피해규모 1兆 추정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34.33 (-45.51)	코스닥	732.95 (-7.65)
금리 (미국 3년)	3.616 (-0.034)	환율 (원/달러)	1299.90 (+0.20) (2일)

韓 '반도체 특별법' 낫잠 잘 때, 中 232단 낸드 양산

中 YMTC '반도체 굴기' 현실로 지정학적 리스크 속 놀라운 성과

엑스태킹 美 핵심 기술 필요한데 무역제재 강화에 생산 늦어질 듯

중국이 낸드플래시 세계 최선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한국 반도체 '샌드위치'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테크인사 이츠는 최근 중국 YMTC가 출시한 SSD에서 232단 낸드 플래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YMTC가 232단 낸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앞서 YMTC는 올해 안에 200단대 낸드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128단에서 100단대 후반을 건너 뛰고 바로 200단대로 진입한다는 것. 애플이 YMTC에서 낸드를 공급받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YMTC의 '반도체 굴기'가 결국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삼성전자도 최근에서야 200단대로 추정되는 8세대 V낸드 양산을 밝혔다. 그나마 마이크론이 그보다 먼저 232단 낸드를 양산했고, SK하이닉스도 최근 238단 낸드 개발을 발표했다. 양산은 내년에서야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YMTC가 232단 낸드 양산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강화한 상황, 미국산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수 없고 애플과 거래도 끊겼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미검증명단에도 올라 더이상 미국 기

업과 거래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YMTC 낸드는 미국 기술을 필수로 한다. 핵심 기술인 '엑스태킹'이 미국 엑스페리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미국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제 생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엑스태킹은 메모리 셀 웨이퍼와 별개로 또다른 웨이퍼에 주변부 회로를 새겨 합치는 방법이다. 다른 낸드 제조사들이 주변부 회로를 셀 아래에 놓거나 옆에 놓는 것과 비교해 생산 비용이 비싸면서 품질도 낮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서 적층 경쟁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MTC는 200단대 낸드 양산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제재를 더 강화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양산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YMTC가 200단대 적층 기술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반도체 업계를 충분히 위협할만한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낸드 양산에서 적층 기술은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메모리 셀을 얼마나 작고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에 따라 용량과 속도, 수율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YMTC가 더블스택을 적용했다고 가정하면 싱글스택으로도 116단까지 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까지도 100단대 초반을 싱글스택으로 쌓을 수 있던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64단이나 128단에서는 조악하다는 혹평을 피하



'16강 주역' 손흥민-황희찬 훈련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황희찬이 4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 못했던 YMTC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확보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YMTC가 당장은 미국 무역 제재 등으로 시장에 나서지 못하겠지만, 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비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면 머지 않아 미국 의존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조격차'를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경쟁국가 대비 2배를 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반도체 특별법조차 몇달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3040 신흥부자 8만명 육박 주식·예금으로 종잣돈 불려

KB금융 '한국부자 보고서'

10억 이상 보유 부자 42.4만명 59% 디지털자산 투자 의향 없어 전통부자, 재건축 등 부동산 투자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는 42만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자산 비중을 늘렸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부채는 2019년 대비 10%포인트(p)가량 줄었다.

KB금융그룹이 4일 발표한 '2022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부자는 42만4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83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보유 총 금융자산(4924조원)의 58.5% 수준이다.

이들 중 금융자산이 10억~100억원 미만인 부자는 38만5000명으로 전체 부자 중 90%를 차지했다. 100억원~300억원 미만인 부자는 7.3%(3만1000명), 300억원 이상인 부자는 2%(8600명)다.

◆한국부자 "1년내 예·적금, 주식투자 늘릴 것"

한국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6.5%, 금융자산 38.5%로 구성됐다. 일반가구의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9.5%와 금융자산 16.1%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가구의 2.4배 수준이다.

자산의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27.5%로 가장 컸고, 유동성 금융자산(14.2%), 빌딩·상가(10.8%), 거주용 주택(10.8%), 예·적금(9.5%), 주식·리츠·ETF(7.9%) 순이었다.

한국부자는 향후 1년 동안 금융자산 중 예·적금과 주식 투자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금리인상과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예·적금을 늘리겠다는 부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향후 3년 내에는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처로는 거주용 외 주택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거주용 부동산(39.5%), 빌딩·상가(38.0%), 토지·임야(35.8%), 주식(31.0%) 순이었다.

한편 한국부자의 59.3%는 디지털 자산투자에 의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39.9%)와 디지털자산 가치 변동률이 너무 높아서(36.1%)가 가장 많았다.

◆신흥부자 "종잣돈 기준 7억원... 디지털자산 이용안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자 중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30~49세 신흥부자는 7만8000명으로 한국부자의 18.4%를 차지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여야 극한 대치에 300조 민생예산 묶일 판

2+2 협의체 가동 예산안 협상 재개 연내 불발 땀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금을 포함 300조원 가량의 정부 재량지출이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또는 증액, 법안제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

비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여야 협의체는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639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법

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현행법상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담긴다. <3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노조원엔 공감 없는 불공정"
▲ 조경태 "종부세, 서울 주택보유자 22%에 부과... 즉각 폐지돼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IRA 개정-유예 논의 요청" ... 한국계美 의원들에 재차 서한
▲ 국회 대표단,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논의 차 방미



▲ 한 총리, 가나 공식방문 투자·원전 등 협력 논의... 귀국길 /사진 뉴시스
▲ 강성조 전 경북 행정부지사,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임명